

조선·철강업계 “수출확대 위해 인력·금융난 해소 시급”

무협, 조선·철강업계 긴급대책회의 정반기 부회장 “中 경제 회복시 하반기 수출 빠르게 안정 찾을 것” 철강, 무역보험한도 확대 등 요청



정반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지난 10일 조선·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무협

최악의 무역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 회복시 하반기 이후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다만, 조선·철강업계 수출 확대를 위해선 인력·금융난 해소와 함께 대미 수출 쿼터 소진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반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제2회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조선·철강업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친 베트남과 인도 사례를 감안하는 경우,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코로나가 대규모 확산 중인 중국도 1월 중절(음력 1월 1일) 전후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후 3~4월이면 급감하면서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부회장은 “골드만삭스 등 많은 기관들 전망처럼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급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5% 이상으로 회복된다면, 전년 대비 4% 감소가

전망되는 우리 수출도 금년 하반기 이후엔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조선과 철강은 중국과 보완 관계라기보다는 경쟁관계에 있어 중국의 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라며 “수출 확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에 따르면, 조선산업의 경우 LNG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을 지난해 전 세계 발주량의 58%, 친환경 선박 발주량의 50%를 수주하는 등 대규모 수주로 인해 올해 수출은

20% 이상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조선업 종사자수가 2014년 20만명 수준에서 2022년 7월경 9만 명 수준으로 54% 가량 감소하며 인력난에 직면한 상태다.

정 부회장은 “기존 정부 대책과 더불어 퇴직 인력 재취업 등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며 “금융 기관과 보증 기관의 선박 금융과 보증한도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특히 우리의 철강 대미 수출은 263만 톤의 수출 쿼터 중 분기별로 30%를 채워야 하지만 이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쿼터 잔여량의 다음 분기 로의 이월이 허용되지 않아 미 소진 물

량을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쿼터 잔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중소 철강 업체들에게 쿼터량의 일부를 배정하는 등 쿼터량의 100% 소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분기별 미 소진량 이월이 허용되도록 미국과의 협상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부회장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시 대 유럽연합 수출이 5.8% 상당의 관세 부과 효과로 인해 약 12.3% 수출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며 “우리도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액을 고려해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 할당을 무상 할당으로 전환하거나 수출 리베이트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선업계에서는 최근 수출 회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난 해소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권봉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장은 회의에서 “외국 인력 도입 확대와 E7비자(조선업 관련 특별활동비자) 발급 신속화 등 지원책을 정부가 최근 마련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 부장은 신규 건조 척수 증가에 따른 조선업계 자금 수요가 대폭 증

가한 반면, 원자재 가격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전하며 “선수금 환급보증(RG)과 선물환 매입을 위한 은행별 여신 한도 확대와 특별 한도 제공 등 추가적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퇴직 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세제 혜택이나 고용 장려금 지급 등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회의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지침 상 E7비자를 보유한 외국 인력에게 GNI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70% 미만으로 줄이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철강업계에서는 최근 수요 침체와 신흥국의 철강 생산 역량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에다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수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또 영세 업체 대상 거래 시 무역 보험 한도가 수출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며 무역 보험 한도 확대를 요청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기보, 본부조직 축소 등 조직 개편 단행

11부 4실2추진단→10부 4실
미래혁신사업 전략부서 신설

기술보증기금이 조직을 개편해 미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기보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맞춰 본부조직을 줄이고 미래혁신사업 수행 전략부서를 신설하는 등 ‘2023년도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본부조직을 ‘11부 4실 2추진단’에서 ‘10부 4실’로 개편했다.

특히, 본부부서를 ▲전략기획 ▲경영관리 ▲기술금융 ▲혁신성장 등 4개 부문제로 전환해 부문장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사업부서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시너지 향상을 꾀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사업 조직으로 운영됐던 탄소중립추진단, 매출채권팩토링추진단을 정규조직에 흡수해 내실화하고, 기보의 미래혁신사업 수행을 위한 전략조직으로 녹색콘텐츠 금융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영업조직은 부산지역본부와 경남울산지역본부를 통합해 부·울·경 광역관

리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등 9개 지역본부를 8개 지역본부로 개편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하기로 했다.

김종호 이사장은 “기보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향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강화 등 세가지 원칙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기보의 미래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집중함으로써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복합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설 연휴 무단폐수·미세먼지 배출 집중단속

환경부-지자체, 5600곳 특별단속
적발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

설 연휴기간 폐수, 미세먼지 배출업체 전국 5600여 개 사업장 대상으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설 연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1~27일 특별 감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전국 5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환경부는 오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단속에 나선다.

지방 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특히,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400여 곳 현장도 확인한다.

설 연휴기간인 21~24일은 상황실 운영,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지방 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휴가 끝난 25~27일은 단속기간 환경오염물질 방지 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장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이기간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128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기간 동안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승강기안전공단, 명절 승강기 특별점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설 명절을 맞아 KTX 역사 승강기에 대해 1월 9일부터 20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귀성객이 많이 몰리는 전국 23개 KTX 주요 역사에 설치된 승강기 134대다.

주요 점검사항은 에스컬레이터는 ▲손잡이 작동 상태 ▲권상기 및 구동체인 설치 상태 ▲상하부 비상정지장치 작동 상태 등이며, 엘리베이터는 ▲문

담합 안전장치 작동 상태 ▲비상통화장치 작동 상태 ▲안전수칙 부착 상태 ▲안전이용에 대한 안내방송 송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승강기안전공단 이용표 이사장은 “승강기 이용량이 집중 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승강기 이용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KTX 역사 승강기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확진 후 호텔에서 붙잡힌 중국인 “공항장애 약 가지러 이동” 도주 부인 /사진 뉴스스
▲ 검찰, 경찰청 이틀째 압수수색… ‘이태원 참사’ 보강수사

▲ ‘2215억 횡령’ 오스템 전 재무팀장, 1심 징역 35년
▲ 서훈 “월북물이 할 이유 없어” vs 檢 “책임 전가한 것”… 보석심문 설전



▲ 이태원 참사 유가족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기자회견 /사진 뉴스스
▲ 간호법, 8개월째 계류… “정쟁 멈추고 즉각 제정 해달라”